「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4호(2018 겨울): 391-409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1 No.4 (2018 Winter)
http://dx.doi.org/10.20484/klog.21.4.17

정부의 질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 정 인*
김 태 형**
정 세 희***
문 명 재****

국문요약

최근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을 넘어서 정부의 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는 거시적 차원의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좋은 정부는 실제로 국민 삶의 질적인 향상을 이끌어내는가? 본 연구는 정부의 질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향상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경제성장은 정부의 질과 삶의 질에 있어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144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연구에서 가정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질적 측면 중 정부효과성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법의 공정한 지배와 시민참여와 책임성의 향상은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장은 예상한대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행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와 정부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정부의 질, 국민 삶의 질, 좋은정부, 경제성장, 구조방정식

Ⅰ. 서론

발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시대마다 다르게 변화해왔다. 1950-60년대의 국가는 발전의 주요 행위자로 활약하면서 강한 중앙집권적 계획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거대해진 관료제, 국가소유 기업의 지대추구, 후원의 재정적 취약성 등으로 기대했던 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 향상은 오히려 저하되었다. 이러한 산업국가의 과도한 공공지출과 세

* 제1저자
** 제2저자
*** 제3저자
**** 교신저자

금 부담에 대한 불만과 NPM 시대의 도래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시장이 사회경제발전에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되었다. 경제자유화, 민영화, 공공부문의 규모축소가 뒤를 잇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정부의 역할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국민은 국가가 보건, 교육, 안전 등 삶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최근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도 기존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을 넘어서 정부의 질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는 거시적 차원의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좋은 정부에 대한 정의는 곧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거버넌스의 요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거버넌스 요소로 정부의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법의 지배(rule of regulation),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의 6가지 세부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좋은 정부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을 기반으로(법의 지배), 건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정부의 효과성과 규제의 질), 올바른 정부의 활동을 견인하는 시민의 참여와 정부의 책임성이 담보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좋은 정부가 실제로 국민 삶의 질적인 향상을 이끌어내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법의 지배,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의 요소를 갖춘 정부가 국민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삶의 질을 객관적 지표로 측정한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정부의 질이 개인의 행복,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 주관적인 삶의 질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Heesami, 2010; Kim & Kim, 2012; Ott, 2011; Smanni & Holmberg, 2010; Tavits, 2008; Veenhoven, 1984). 그러나, 행복과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는 설문시점의 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명백한(apparent) 삶의 질이라기보다는 추정된(assumed) 지표로써 한계를 지닌다(Veenhoven, 1996). 이에 출생시 기대수명으로 측정된 건강지표와 성인의 평균 교육연수 그리고 학령기 아동의 기대교육연수로 산출된 교육지표를 포함하여 보다 객관적인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경제성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기존 연구에서 경제지표는 건강, 교육과 함께 삶의 질의 한 차원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을 국민 삶의 질의 주요한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국민의 건강과 교육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질은 국가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국민 삶의 질적 측면으로 건강과 교육의 기회가 향상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질과 삶의 질, 그리고 경제성장의 인과관계를 144개국의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부의 질과 국민 삶의 질의 개념

삶의 질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며, 삶의 질이 사회발전의 어떤 속성이나 가치, 차원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다(Radcliff, 2001). 삶의 질은 삶의 기회의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전자가 주로 소득, 교육, 지위, 건강 등 사회 환경적 조건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 후자에서는 사회적 욕구충족이나 행복을 느끼는 정도 등에 관심을 갖는다(서문기, 2015). 이 두 가지 차원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조건 및 만족도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개념 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삶의 질은 대표적으로 전반적인 삶에 대한 호의, 만족도 또는 행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주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측정되었다(Heesami, 2010; Kim & Kim, 2012; Ott, 2011; Smanni & Holmberg, 2010; Tavits, 2008; Veenhoven, 1984).

본 연구에서는 국민 삶의 질은 행복, 삶의 만족도와 같은 설문시점의 인지적 관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삶의 질을 명백하게 나타내어 주는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근간이 되는 지표로 건강과 교육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질병 또는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닌 신체, 정신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조건이 결여된 국민은 삶을 온전히 영위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교육은 지식의 전파로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은 국민의 삶의 윤택함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습된 지식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경제지표로서 소득, 국민총생산 등은 삶의 질의 한 차원이 아닌 삶의 질을 이루는 선행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경제성장은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시설, 사회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자, 교육기관, 교육자 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질에 대한 개념은 좋은 정부를 구성하는 거버넌스 요소를 포함하여 부패, 관료의 공정성 등의 요소로 설명되고 있다(e.g. Helliwell, 2005; Samanni & Holmberg, 2010). 본 연구에서 정부의 질은 거버넌스의 4가지 요소[1]로 정부효과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시민참여와 책임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정부효과성은 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으로 공공서비스 그리고 정부의 정책형성과 집행의 질을 나타낸다. 규제의 질은 건전한 정책의 형성, 집행에 대한 정부역량과 규제완화의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법의 지배는 법치에 의한 사회의 평등, 공정의 정도를 나타낸다. 시민참여와 책임성은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권리, 정치적 권리를 의미한다. 즉, 정부의 질이 높은 국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을 기반으로(법의 지배), 건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정부의 효과성과 규제의 질), 올바른 정부의 활동을 견인하는 시민의 참여와 정부의 책임성이 담

1) 거버넌스의 세부항목에 대한 개념정의와 설명은 Kaufmann 외 (2010)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보된다.

2. 정부의 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질은 국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거버넌스의 요소를 갖춘 좋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가? 오늘날 국민은 국가가 단순한 경제적 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과 건강 등 삶의 질적인 요소를 충족시켜주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질이 높은 국가에서는 국민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법, 좋은 정책, 집행 능력 등)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정부의 질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역시 정부의 질이 국민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으며, 대부분 정부의 질이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있다(Heesami, 2010; Helliwell, 2005; Huang, 2008; Kim & Kim, 2012; Ott, 2011; Smanni & Holmberg, 2010; Tavits, 2008; Veenhoven, 1984).

Helliwell(2005)은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세계은행의 6가지 거버넌스 세부항목을 활용하여 정부의 질은 국민의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또한, Samanni & Holmberg(2010) 연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정부'란 효율적 정부, 법의 규칙, 관료적 공정성, 그리고 낮은 부패를 지니는 국가임을 95개국의 분석결과를 통해 설명하였다. Tavits(2008)는 부패지수를 포함한 정부의 질이 높은 국가일수록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국내연구로 배정현(2014)은 아시아 8개국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요소로 정치적 안정과 참여,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 등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이라는 인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정부의 질이 높을수록 국민 삶의 질(건강, 교육)은 향상될 것이다.

3. 정부의 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질이 높은 국가는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할까? 오늘날 비효율적이고 비대하게 커진 관료제에 대한 폐해와 이에 따른 NPM 개혁으로 정부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실제로 90년대 이후 거버넌스의 요소를 통해 경제성장을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정성호, 2010).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거버넌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수렴과 확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Fayissa & Nsiah(2010) 연구에서는 세계은행의 거버넌스지표 중 6개 지표가 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득분포의 하위에 있는 국가는 상위에 있는 국가보다 소득에 대한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고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에서의 거버넌스 향상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Bouoiyour & Naimbayel(2012) 연구에서는 거버넌스가 경제성장률과 빈곤의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장기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도 WGI 6개 지표가 1인당 소득증가율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부의 질이 높을수록 국가의 경제성장이 높아지는 것을 밝혔다.

국내연구로 신영수 외(2012)는 높은 품질의 제도(부패 억제, 법의 통제)를 보유한 나라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을 보인다고 이야기 한다. 신뢰, 민주주의, 부패 억제, 법의 통제 등은 모두 굿 거버넌스의 핵심 요인들에 속한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거버넌스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가늠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질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성호(2010)의 연구에서도 WGI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중에서 시민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규제의 질, 정부효과성이 1인당 GDP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질적 제고가 실제로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효과적인 정부, 공정한 법의 지배, 규제의 질,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은 향상될 것이다.

H2: 정부의 질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이 높아질 것이다.

4. 경제성장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인 건강과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수준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빈곤의 감소, 삶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시키는 등 우리사회가 직면해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김승원·최상명, 2014).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삶의 질 수준은 높으며, 삶의 질의 포화점(station point)은 없다(Deaton, 2008). 사람들은 재화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욕구들이 충족이 되면 행복감이 상승된다(Hagerty & Veenhoven, 2003; Stevenson & Wolfers, 2008; Veenhoven, 1991; Veenhoven & Hagerty, 2006). 즉, 국가의 경제성장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행복감이 상승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초기 1970년대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요인'을 삶의 질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다루었다. Esterlin(1973)은 부유한 나라가 과연 더 높은 행복을 느끼는가에 대한 연구질문을 던지며 부유해 질수록 이에 따른 열망(aspiration)이 높아지기 때문에 행복의 정도는 오히려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199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열망이 증가함에 따라 약화됨을 설명하였다. 최근의 연구도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정부의 질과 삶의 질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Helliwell & Huang(2008)은 75개국을 GDP를 기준으로 상위와 하위로 구분하였고 하위에 속하는 국가에서만 정부의 질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Bjørnskov et al. (2010)의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정부의 질은 가난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Zagorski 외(2010)는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경제

성장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경제적 성장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는 특히 가난한 국가에서 유효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경제적 요인이 주관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왔으며, 경제성장이 객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거버넌스 지수는 소득을 건강, 교육과 하나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건강과 교육의 선행요인으로 경제성장을 가정한다.

H3: 경제성장이 높을수록 국민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5. 정부규모와 민주주의 수준

국민 삶의 질은 단순히 정부의 질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각 국가의 정부규모 그리고 정치체제와 가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정부규모는 정부의 질과 함께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정부의 재원 규모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큰 정부'를 강조함으로써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준다(도수관, 2016). 따라서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영향요인인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가치가 있는 요소이다.

Kim & Kim(2012)의 연구에서는 정부가 국민 삶의 질이나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정부의 질과 양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tt(2011)의 최근 연구에서도 행복의 불공정성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는 정부의 질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정부의 규모와 평균적인 행복은 정부의 질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큰 규모의 좋은 정부는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규모가 크지만 나쁜 정부(bad government)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cully(2001)의 연구에서도 GDP 대비 적정 규모의 정부지출을 초과할 경우 예산낭비로 인해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Yamamura(2011)의 일본 사례연구에서도 정부의 규모는 국민 행복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Hessami(2010)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2개의 EU 국가들의 데이터를 통해 정부의 규모과 국민의 웰빙 사이에 역U자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출과 사회복지에 대한 더 적은 정부의 지출 규모가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Ott(2011)는 삶의 질을 국민의 '행복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거버넌스의 질이 행복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Kim & Kim(2012)의 연구에서도 정부의 질과 규모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국가간 비교연구는 주관적 인식으로 국민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질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Heesami, 2010; Helliwell & Huang, 2008; Samanni & Holmberg).

본 연구는 적정한 정부지출은 정부의 질과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도한 지출은 정부의 질이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의 질이 높은 국가일지라도 정부의 지출이 지나치게 부족한 국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교육에 기반이 되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였다.

H4: 정부의 규모에 따라 정부의 질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의 서로 다른 정치적 환경과의 조화 또는 상충에 의해 정부의 질과 국민 삶의 질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Ott(2011)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질의 한 차원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포함하여 측정하였고, 민주주의와 행복과 U-자형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lia(2008)의 연구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았고 연구결과, 사회적, 경제적 요인은 삶의 만족의 66%를 설명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요인 하에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 수준은 같은 정부의 질을 가진 국가에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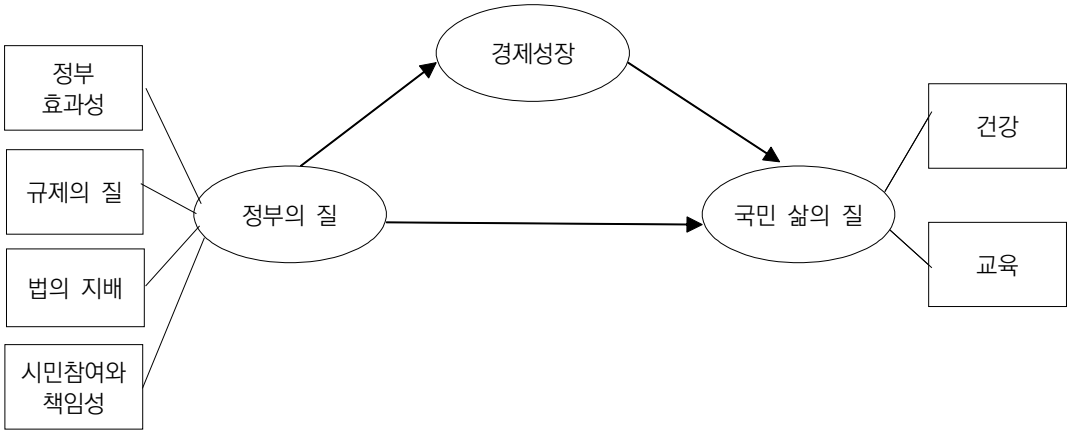
H5: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정부의 질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연구의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정부의 질의 4가지 하위차원으로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시민참여와 책임성으로 구성하였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은 국민의 건강과 교육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한편, 경제성장은 1인당 GDP의 측정지표 자체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정부의 질 향상은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이러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정부의 질은 직접적으로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 분석틀을 중심으로 국민 삶의 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의 규모와 질, 국민 삶의 질적 측면으로 건강과 교육, 그리고 정치, 경제적 요인에 있어 다양한 분포를 지니고있는 144개국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최근 6개년의 시간범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다중적 인과관계(Multi-causal Relationship)를 검증하기 위해 SPSS AMOS v.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변수의 측정

각 측정변수는 6개년 평균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각 국가의 질, 경제성장, 그리고 삶의 질이 한 시점(단년도)의 특정한 수치가 아닌 일정기간(최근 6개년)에 걸친 보다 보편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먼저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로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활용하고자 한다. 인간개발지수는 건강, 교육, 소득의 측면에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과 교육을 삶의 질의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측정을 위해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건강은 출생 시 기대수명의 표준화 값으로 산출되며, 교육은 25세 이상 성인이 평균 교육연수와 아동의 학교를 들어가는데 학령기 아동의 기대교육연수로 측정된 후 표준화된 값으로 나타낸다.

정부의 질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로 측정되었다. 세계은행이 제시한 6가지 거버넌스 요소는 정부의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법의 지배(rule of regulation),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역량으로 정부의 효과성과 규제의 질,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의 지배,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로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의 4가지 지표를

좋은 정부의 구성요소로 활용하였다. 정부 효과성은 정책의 형성과 집행의 과정에서 국민이 인식한 정부서비스로 측정되었다. 규제의 질은 건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능력과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규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으로 측정되었다. 법의 지배는 사회의 규칙과 계약, 지적 재산권, 법, 경찰 등 사회규칙과 법치에 의한 사회의 평등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와 책임성은 시민이 정부를 선택하는 데 참여하는 것과 함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된 것이다.

경제성장은 각 국가의 경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경제성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세계은행의 국내총생산(GDP)을 포함하였다. 국내총생산(GDP)은 국가의 국민 총생산에서 투자수익 등의 해외로부터 유입된 순소득을 제외한 값으로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이다(정성호, 2010). 그 외 정부의 질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양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규모로 Penn World Table의 구매력평가대비 정부지출 정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국가의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Freedom House의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표 1〉 변수 및 측정지표

구분	개념	측정지표		범위	자료출처
종속변수	삶의 질	인간개발지수	건강	0점~1점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
			교육		
독립변수	정부의 질	거버넌스 지수	정부 효과성	-2.5점~2.5점	World Bank의 The World Wide Governance Indicator
			규제의 질		
			법의 지배		
			시민참여와 책임성		
매개변수	경제성장	인당 GDP(log)		USD	World Bank
정치		민주주의 수준		0점~10점	Freedom House의 Level of Democracy
정부규모		구매력평가(PPPs) 대비 정부 지출규모		0점~1점	Penn World Table의 Size of Government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국민 삶의 질적 지표로 건강의 평균은 0.790, 교육은 0.641로 건강이 교육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건강과 교육의 평균값은 중간값(0.5)보다

높은 편이나 국가별 격차가 큰 편이다. 교육의 질이 높은 국가들로는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가 0.9이상의 값을 지니며, 교육의 질이 낮은 국가로는 아프리카의 니제르(0.197), 부르키나파소(0.253), 차드(0.272) 등이 있다. 국민 건강은 교육에 비해서 국가 간 격차는 적은 편이다. 건강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0.974)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아프리카의 레소토(0.447)이다.

정부의 질의 4가지 하위차원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규제의 질, 정부의 효과성, 법의 지배, 시민참여와 책임성 순이다. 4가지 차원 모두 평균값이 중간값(0)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다. 정부의 질에서 2점 이상을 기록한 국가로는 효과적인 정부로는 핀란드와 싱가포르, 법의 지배는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이다. 반면, 규제의 질과 시민참여의 책임성의 측면에서 -2점 이하를 기록한 유일한 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이다.

경제지표로 국민의 1인당 GDP는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룬디와 콩고 등이 최빈국에 속한다. 민주주의 수준은 10점 만점인 국가가 144개국 중 총 32개국이고 민주주의 수준이 1점 이하인 국가로는 국왕중심제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있다.

〈표 2〉 기술통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삶의 질	건강	144	0.790	0.130	0.447	0.974
	교육	144	0.641	0.176	0.197	0.936
정부의 질	정부의 효과성	144	0.088	0.970	-1.694	2.180
	규제의 질	144	0.103	0.919	-2.086	1.951
	법의 지배	144	0.039	1.016	-1.484	2.386
	시민참여와 책임성	144	0.018	0.952	-2.145	1.706
경제	인당 GDP(log)	144	3.750	0.669	2.334	5.043
정치	민주주의 수준	144	6.952	2.909	0.069	10
정부	정부 규모	144	0.196	0.107	0.041	0.91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정부규모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 간에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지닌다. 국민 삶의 질의 하위차원으로 건강과 교육은 높은 상관관계(0.82)를 보이고 있고, 정부 질의 4가지 하위차원도 0.5이상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논지인 정부의 질과 국민 삶의 질에도 0.5이상의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경제변수는 국민 삶과 정부의 질의 모든 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국민 삶의 질과 정부의 질의 하위차원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과 0.93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다.

〈표 3〉 변수간 상관관계

	건강	교육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시민 참여와 책임성	인당 GDP	민주주의	정부규모
건강	1								
교육	0.82***	1							
정부효과성	0.77***	0.78***	1						
규제의질	0.73***	0.75***	0.93***	1					
법의 지배	0.69***	0.67***	0.94***	0.87***	1				
시민 참여와 책임성	0.60***	0.64***	0.79***	0.79***	0.79***	1			
인당 GDP	0.69***	0.77***	0.74***	0.68***	0.66***	0.52***	1		
민주주의	0.46***	0.50***	0.57***	0.60***	0.56***	0.93***	0.32***	1	
정부규모	-0.01	0.09	-0.05	-0.07	-0.01	0.02	0.03	0.08	1

****p<0.01*

2. 확인적 요인분석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질과 삶의 질에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요소가 존재한다. 이론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각 세부지표가 실제 삶의 질과 정부의 질 개념을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검증하였다. 〈표 4〉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측정모형의 적합성은 대체로 적정한 수준이다. 카이제곱검정의 p-value는 0.000으로 연구모형과 분석자료가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표본수가 많거나 실제모형이 복잡하여 모수가 많은 경우, 데이터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카이제곱 검정의 적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홍세희, 2000). 따라서 카이검정 이외의 다른 적합성 지수인 CFI, TLI, NFI, IFI 모두 0.9이상으로 높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하위차원은 고차원의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분석결과

잠재 변수	경로	Standardized Estimates	Std. Error	P-value
삶의 질	건강 ← 삶의 질	0.899		
	교육 ← 삶의 질	0.907	0.090	0.000
정부의 질	정부효과성 ← 정부의 질	0.996	0.082	0.000
	규제의 질 ← 정부의 질	0.935	0.080	0.000
	법의 지배 ← 정부의 질	0.939	0.089	0.000
	시민참여와 책임성 ← 정부의 질	0.797		
모형의 적합성	N	144		
	Chi-sqaure test	32.482		
	p-value	0.000		
	degree of freedom	8		

	CFI	0.977
	TLI	0.957
	NFI	0.970
	IFI	0.977
	RMSEA	0.146

****p〈0.01*

3.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와 유사하게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정부의 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 연구가설과 같이 개별국가의 정부의 질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은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 삶의 질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정부의 질은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도 존재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정부의 질, 경제성장, 정부의 질의 정(+)의 인과관계를 가정한 연구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표 5〉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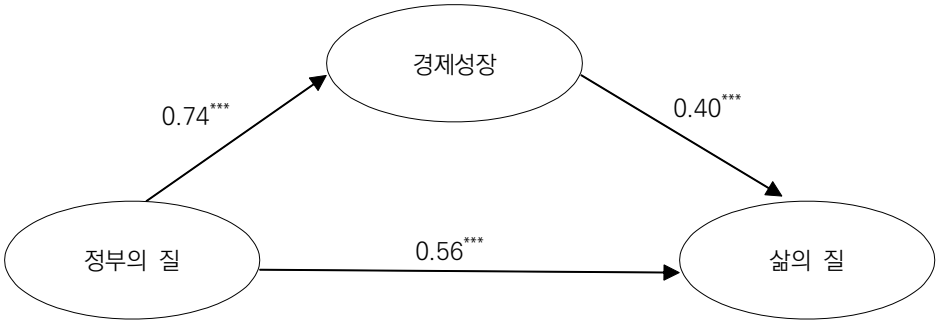
경로		Estimate	Std. Error	가설채택 여부
정부의 질 → 경제성장		0.653***	0.065	H1 채택
경제성장 → 국민 삶의 질		0.069***	0.012	H2 채택
정부의 질 → 국민 삶의 질		0.084***	0.012	H3 채택
모형의 적합성	N	144	TLI	0.953
	Chi-square test	44.473	NFI	0.964
	p-value	0.000	IFI	0.973
	CFI	0.973	RMSEA	0.138

****p〈0.01*

아래 〈그림 2〉는 위의 구조방정식 분석을 표준화된 경로계수로 나타낸 결과이다.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정부의 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추가분석으로 각 정부의 질의 거버넌스 요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부효과성만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estimate=0.730, p-value=0.00), 경제성장은 건강(estimate=0.134, p-value=0.00)과 교육(estiamte=0.203, p-value=0.00)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표 6〉은 경제성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정부의 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모두 p-value=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여기에서 직접효과는 0.557이며 이는 경제성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로 0.297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질은 국민 삶의 질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좋은 정부일수록 국민의 건강과 교육을 포함한 삶의 질적 향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영향의 정도는 적으나, 좋은 정부는 경제성장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6〉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Standardized Estimates	Std. Error	P-value
정부의 질 → 삶의 질	0.557**	0.110	0.01
정부의 질 → 경제성장 → 삶의 질	0.297**	0.101	0.01

****p〈0.01, **p〈0.05, *p〈0.10*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기본가설이 각 정치체제 또는 정부규모에 의해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가를 분류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수준의 평균값(6.952) 이상은 고민주주의 국가 평균값 미만은 저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민주주의 수준에 따른 두 국가군 모두에서 정부의 질,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간의 정(+)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는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로계수와 매우 비슷한 값을 지니고 있다. 정부의 질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국민 삶의 질은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질은 직접적으로 국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그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좋은 정부를 구성하는 거버넌스 요소들은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경제성장 또는 국민 삶의 질에 더욱 큰 효과를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거버넌스의 요소로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 규제완화의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의 질 등이 민주주의 수준

이 기반이 되었을 때 더욱 안정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 건강과 교육에 있어 경제성장은 저민주주의 국가에서 더욱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민주주의 수준이 정부의 질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다섯 번째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7〉 민주주의 수준에 따른 분석결과

경로		고민주주의 국가		저민주주의 국가	
		Standardized Estimate	Std. Error	Standardized Estimate	Std. Error
정부의 질 → 경제성장		0.740***	0.087	0.631**	1.009
경제성장 → 국민 삶의 질		0.405***	0.014	0.447**	0.021
정부의 질 → 국민 삶의 질		0.565***	0.016	0.465***	0.146
모형의 적합성	N	84		60	
	Chi-square test	39.673		33.966	
	p-value	0.000		0.001	
	CFI	0.962		0.936	
	TLI	0.934		0.887	
	NFI	0.948		0.906	
	IFI	0.963		0.937	
	RMSEA	0.167		0.176	

****p〈0.01, **p〈0.05, *p〈0.10*

다음으로 정부규모에 따른 주요변수의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정부규모는 평균값(0.196)을 중심으로 정부규모가 큰 국가 65개국과 작은 국가 79개국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양적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규모가 적은 국가에 비해 정부의 질이 경제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의 지출규모와 거버넌스의 요소를 갖춘 좋은 정부가 함께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삶의 질에 있어 정부지출규모가 적은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이 매우 중요한 선행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교육의 측면에 상대적으로 정부의 물질적 투자가 적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질적 측면의 제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으며, 향후 추가분석을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표 8〉 정부규모에 따른 분석결과

경로		큰 정부규모		작은 정부규모	
		Standardized Estimate	Std. Error	Standardized Estimate	Std. Error
정부의 질 → 경제성장		0.850***	0.058	0.664***	0.127
경제성장 → 국민 삶의 질		0.709***	0.024	0.321***	0.013
정부의 질 → 국민 삶의 질		0.224*	0.015	0.670***	0.022
모형의 적합성	N	65		79	
	Chi-square test	48.258		23.718	
	p-value	0.000		0.022	
	CFI	0.941		0.982	
	TLI	0.896		0.968	
	NFI	0.924		0.964	
	IFI	0.941		0.982	
	RMSEA	0.217		0.112	

****p〈0.01, **p〈0.05, *p〈0.10*

V. 결론

본 연구는 좋은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실제로 향상시키는지 144개국의 국가별 비교분석을 통하여 물음에 답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질은 좋은 정부의 구성요소로 정부의 효과성, 법의 지배, 규제의 질, 그리고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으로 측정되었다. 국민 삶의 질은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로 건강과 교육의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인당 대비 국내총생산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가설은 정부의 질은 경제성장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은 정부의 질과 삶의 질에 있어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질, 경제성장, 그리고 삶의 질의 인과관계는 정부의 규모와 정치체제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질은 국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은 정부의 질과 국민 삶의 질에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즉, 좋은 정부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과구조는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부의 질이 국민 삶의 질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정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정부의 양적 측면 역시 정부의 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정부의 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경제성장을 기반

으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정부의 규모가 적은 국가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즉 정부의 지출규모와 거버넌스의 요소를 갖춘 좋은 정부가 함께 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반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대체제의 성격으로 정부의 질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더욱 크다. 규모의 지출을 늘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좋은 정부의 요소를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다양한 변수의 확보와 다국가 분석을 위해 시간범위가 최근 6개년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시간범위를 설정하여 정부의 질, 국민 삶의 질,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 삶의 질적 측면으로 객관적 지표인 건강과 교육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인식한 삶의 만족 정도, 행복감 정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추정된 인식과 실제 명백한 삶의 질에 대한 차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승원·최상명 (2014). 경제성장·소득분배·사회지표 간의 관계분석을 통한 성장 중심 거시경제 정책 평가. 동향과 전망:262-295.

배정현. (2014).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 행정논총. 52(1): 247-270.

신영수 외 (2012).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 간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의 잠재성장력 종합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04-01(12).

정성호 (2010). 거버넌스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연구, 19(3): 171-202.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Bououiyour, Jamel & Djékondé Naimbayel (2012). "Economic Growth in Sub-Saharan Africa: Is Governance a Source of Inequality between Countries?" The 4th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GREThA/GRES, Bordeaux University.

Bjørnskov, Christian, Axel Dreher, and Justina A. V. Fischer (2007). The Bigger the Better? Evidence of the Effect of Government Size on Life Satisfaction around the World. Public Choice, 130(3): 267-292.

Easterlin, Richard A. (1973). Does Money Buy Happiness? The public interest, 30: 3.

_____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7(1): 35-47.

Fayissa, Bichaka & Christian Nsiah (2010). The Impact of Governance on Economic Growth: Further Evidence for Africa. Depart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Working Paper Series, Middle Tenessee State University.

Helliwell, John F., & Haifang Huang (2008). How's Your Government? International Evidence Linking Good Government and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4): 595-619.

Hessami, Zohal (2010). The Size and Composition of Government Spending in Europe and Its Impact on Well-Being. Kyklos, 63(3): 346-382.

Kacapyr, Elia (2008). Cross-Country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with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35(6): 400-16.

Kaufmann, D., Kraay, A., & Mastruzzi, M. (2011).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methodology and analytical issues. *Hague Journal on the Rule of Law*, *3*(2): 220-246.

Kim, Meesook & Kyung-Ho Cho (2003). Quality of Life among Government Employees.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Springer, 387-409.

Kim, Seoyong, & Donggeun Kim (2012). Does Government Make People Happy?: Exploring New Research Directions for Government's Roles in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5): 875-899.

Mafrolla, Elisabetta & Eugenio D'Amico (2016). Does Public Spending Improve Citizens' Quality of Life? An Analysis of Municipalities' Leisure Supply. Local Government Studies, 42(2): 332-350.

Ott, Jan (2005). Level and Inequality of Happiness in Nations: Does Greater Happiness of a Greater Number Imply Greater Inequality in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4): 397-420.

Ott, Jan Cornelis (2014). Good Governance and Happiness in Nations. Encyclopedia of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Research. Springer, 2580-2587.

_____ (2011). Government and Happiness in 130 Nations: Good Governance Fosters Higher Level and More Equa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2(1): 3-22.

United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 (2016). Human Development Index. Human Development Reports.

Samanni, Marcus, and Sören Holmberg (2010) Quality of Government Makes People Happy. QoG Working Paper Series 1.

Scully, Gerald W. (2001). Government Expenditure and Quality of Life. Public Choice 108(1): 123-145.

Stevenson, B. and Wolfers, J. (2008) "Economic Growth and Subjective Well-being: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Working paper 1428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Jun 3 2014 retrieved from www.nerg.org/papers/w14282

Tavits, Margit (2008). Representation, Corrup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12): 1607-1630.

Hagerty, M. and Veenhoven, R.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Growing Wealth of

Nations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1): 1-27.
UNDP (2016). Human Development Reports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Veenhoven, R. and Hagerty, M. (2006) "Rising Happiness in Nations 1946-2004: A Reply to Easterli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9: 421-436.
Veenhoven, Ruut (2000). Well-Being in the Welfare State: Level Not Higher, Distribution Not More Equitable.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2(1): 91-125.
Yamamura, Eiji (2011). The Influence of Government Size on Economic Growth and Life Satisfaction: A Case Study from Japan." Japanese Economy, 38(4): 28-64.
Zagorski, Krzysztof, Jonathan Kelley, and Mariah D. R. Evans (2010). Economic Development and Happiness: Evidence from 32 Nations. Polish Sociological Review, 169.

최정인(崔正仁):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관리, 정부성과, 정책분석 등이다(choejungin@naver.com).

김태형(金泰亨):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연구 관심분야는 조직, 공공관리, 정책수단 등이다(taehyung@yonsei.ac.kr).

정세희(丁世喜):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관리, 재난관리, 위기관리 등이다(joungsh17@naver.com).

문명재(文命在):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는 공공관리, 전자정부, 행정수단, 조직론, 리더십 등이다(mjamoon@yonsei.ac.kr).

〈논문접수일: 2018. 1. 15 / 심사개시일: 2018. 1. 19 / 심사완료일: 2018. 1. 12〉

Abstract

The Impact of the Quality of Government on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conomic Growth

Choe, Jungin
Kim, Taehyung
Jung, Sehee
Moon, M. jae

The recent discussion on the quality of life goes beyond considering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factors and now also considers the quality of government as an important factor. Good government can not only make impact on the national development in a macro level, but it can also change the quality of an individual's life in a micro level.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good government on an individual's quality of life. The main hypothesis is that good quality of government will improve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it will ultimately enhance the quality of lives of the citizens. Data from 144 countries from 2010 to 2015 were looked into,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effectiveness has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while the rule of law, engagement of citizens, and improved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actually have nega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Moreover, as expected, economic growth is an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Lastly, specific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different political systems and sizes of other countries' governments.

Key Words: Quality of government, quality of life, economic growth, SEM